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

일본 : 코로나19 관련 동향

2020. 12. 10

1. 확산 동향

□ 일본에서는 1월 15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12월 10일까지 총 173,128명의 감염자와 2,526명의 사망자가 발생(12월 10일 23:59 기준)

○ 지역별 누계 확진자는 도쿄도(45,529명), 오사카부(23,835명), 가나가와현(14,313명), 아이치현(12,137명), 홋카이도(10,805명), 사이타마현(9,913명), 치바현(7,827명), 효고현(6,998명), 후쿠오카현(6,343명) 순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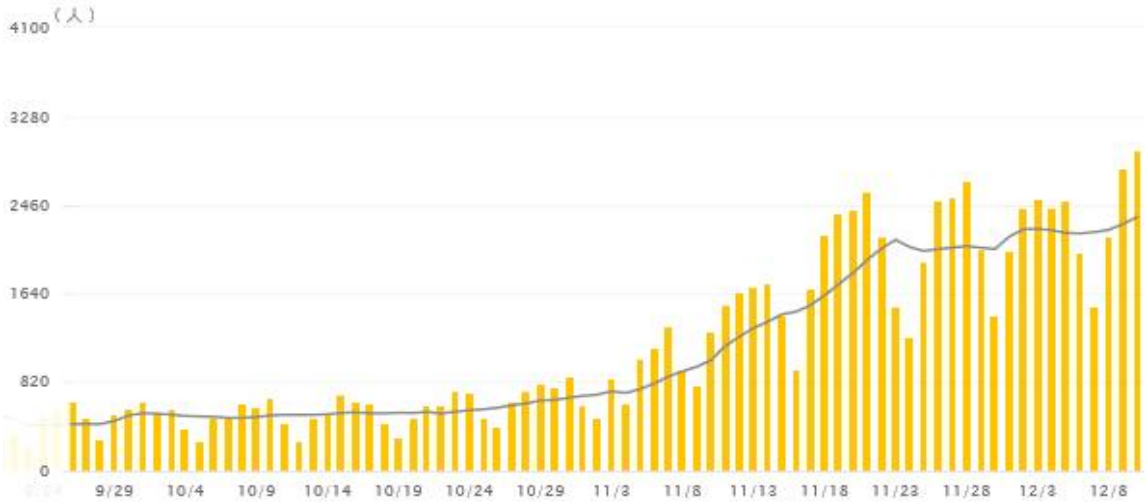
□ 일본의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수가 약 3,000명에 육박하는 등 3차 펜데믹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

○ 12월 1일 신규 확진자수가 2,028명으로 2,000명을 돌파하였으며 12월 7일을 제외하고는 일일 확진자수가 2,000명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임. 12월 9일에는 확진자수가 급증(2,174명→2,810명)하였으며 12월 10일에는 최고 수준인 2,972명을 기록

○ 지역별로 보면 도쿄의 12월 10일 신규 확진자수가 일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인 602명이었으며, 오사카(415명), 가나가와(214명) 등 수도권 및 홋카이도(241명)의 감염 확산이 두드러짐.

<그림 1>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추이

(단위 : 명)



주: 2020년 12월 10일 기준
자료: https://www3.nhk.or.jp/news/special/coronavirus/?utm_int=detail_contents_news-link_001 (검색일: 2020. 12. 10).

2. 정부의 대응

□ 일본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2월 8일 40조엔 규모(재정지출 기준)의 종합경제대책을 책정[1)]

○ 일본 정부가 책정한 종합경제대책은 크게 ①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 ② 경제구조의 전환 및 선순환 실현(그린뉴딜, 디지털 개혁 등) ③ 국토강인화 등 3가지 축으로 구성

○ 이 중 코로나19 대응책은 ① 의료제공체제의 확보 및 의료기관 지원 ② 검사체제의 확충, 백신접종체제의 정비 ③ 철저한 감염방지대책 ④ 국제협력 등 4가지임.

– (의료제공) △ 코로나19 긴급포괄지원 급부금 증액 △ 코로나19 의료기관 정보지원 시스템(G-MIS) 확충 △ 의료기관 등의 감염확대 방지 지원 등

* 코로나19 긴급포괄지원 급부금: 지자체가 각자 지역 실정에 맞게 중점의료기관 등의 병상확보, 경증 환자의 숙박시설의 확보 지원, 외국인 대응 등 의료제공 체제 강화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부금

– (검사체제) 크게 PCR 검사·항원검사의 체제정비, 백신접종 체제의 정비 및 치료약의 개발 등이 주요 대책임.

* 검사체제 정비 : PCR 검사 및 항원검사 실시, 항원검사 키트 매입 등

* 백신, 치료약 : 코로나19 백신접종 체제의 정비 사업, 백신 생산 체제 등 정비기금의 확충, 코로나19 치료약 등의 확보, 코로나19 치료약의 시험 및 약사(薬事) 신청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

– (감염대책) △ 코로나19 대응 지방창생 임시교부금 확충(1.5조엔) △ 전화·온라인 등 원격진료 규제특례의 지속 실시 △미즈기와(水際) 대책(해외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 차단) 강화 △ 임상정보를 관리할 기반을 구축, 새로운 검사 방법 및 치료 등의 연구개발을 실시

* 원격진료 규제특례 : 기존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초진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

– (국제협력) △ 개도국의 의료체제 지원 △ 개도국의 백신, 약 확보 지원 등

○ 본 대책의 전체 규모는 40조엔이며, 이 중 약 40%인 15.9조엔이 코로나19 대응에 배정

–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 대책에 5.9조엔, 예비비에 10조엔을 책정

<표 1> 종합경제대책에 포함된 코로나19 대응 정책

구분	주요 내용
의료제공체제	·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중점의료기관 등의 병상확보 및 경증자의 숙박요양시설의 확보 지원 등의 강화를 도모

1) 内閣府(2020. 12. 8), 「「国民の命と暮らしを守る安心と希望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」について」. pp 7-13.

구분	주요 내용
	· 진료, 검사 의료기관 등의 감염확대방지 등의 추진을 지원 · 코로나19 의료기관 등 정보지원 시스템 확충 · 입원의료기관, 귀국자 및 접촉자를 수용할 음압시설 등 시설정비 지원 등
검사체제, 백신	· PCR 검사, 항원검사의 실시 · 항원검사 키트의 매입 · 코로나19 긴급포괄지원교부금 지급 · 백신 접종체제의 정비 등의 사업, 백신생산체제 등 긴급정비기금의 확충 ·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확보 등의 사업 추진 등
철저한 감염방지대책	· 코로나19 대응 지방창생 임시 교부금의 확충 · 의료정보 사이트 기반 구축 및 원격의료 특례조치 지속 실시 · 미즈기와 대책 강화 등
국제 협력	· 국제협력기구(JICA)를 통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· 국제금융기관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· 의약품 연구개발비 등 지원 사업 등

자료: 内閣府(2020. 12. 8), 「「国民の命と暮らしを守る安心と希望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」について」, pp 7-13.

3. 경제적 영향

□ 12월 8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3분기 GDP 2차 속보에 따르면,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5.0% → 5.3%로 상향 조정[2)]

○ (개관) 개인소비, 설비투자의 증가 및 통계에 반영되는 항목의 추가로 GDP 추계 방식이 일부 바뀐 점 등이 3분기 GDP 성장률 증가로 이어짐.

– 신규로 통계에 반영된 항목은 주택의 개·보수 비용, 민박 요금, 저작권 등 서비스 분야임.

○ (소비) 가계부문 개인소비가 1차 속보치와 비교했을 때 4.7% → 5.1%로 상향 조정됨.

○ (투자) 1차 속보치 발표 당시에는 공표되지 않았던 3분기 법인기업통계 결과가 반영되면서 설비투자가 전기대비 -3.4% → −2.4%로 상향 수정

○ (무역) 수출은 변동이 없으나, 수입이 소폭 증가(−9.8% → −8.8%)

○ (평가) 일본의 한 민간연구소는 GDP 성장률이 수정되었지만, 여전히 경기 전망을 크게 바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[3)]

<표 2> 3분기 실질 GDP 주요 내역

구분	2019년	2020년			
		1/4	2/4	3/4(1차)	3/4(2차)
실질 GDP	0.7	−0.6	−8.2	5.0	5.3
개인소비	0.1	−0.7	−8.1	4.7	5.1
주택투자	2.1	−4.0	−0.5	−7.9	−5.8
설비투자	0.7	1.7	−4.5	−3.4	−2.4
정부지출	1.9	0.0	−0.4	2.2	2.8
공공투자	2.9	−0.3	1.2	0.4	0.5

2) 内閣府(2020. 12. 8), 「2020年7~9月期四半期別ＧＤＰ速報 （２次速報値）」.

3) 三菱UFJリサーチ＆コンサルティング(2020. 12. 9), 「2020年7~9月期のＧＤＰ（2次速報）結果~上方修正されるも、前期の落ち込みの反動増としては依然力強さに欠ける」.

수 출	−1.6	−5.3	−17.4	7.0	7.0
수 입	−0.7	−4.1	2.2	−9.8	−8.8

자료: 각종 언론, 정부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

<표 3>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대책

일시	내용
2019년 12월 5일	− 재정지출 13.2조엔 규모의 '종합경제대책'을 책정 * 주요 내용은 ① 재해복구 및 부흥, ② 경기하강 리스크 최소화, ③ 미래 투자 및 도쿄올림픽 이후 경제 활력 유지 등 크게 3가지 축으로 구성
1월 24일	− 외무성은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을 두 번째로 강한 '레벨 3(여행 중지 권고)'으로 격상
1월 30일	**− 내각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범정부 대책본부 설치(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本部)**
1월 31일	− 외무성은 중국 전역의 감염 위험 정보를 '레벨 2(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)'로 격상하고,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및 후베이성 발행 중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 거부를 발표
2월 1일	− 코로나19를 '지정감염증'으로 지정하여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를 시행 * 조치 시행으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에게 입원을 권고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며,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입원도 가능 * 2003년 사스, 2013년 H7N9형 조류독감, 2014년 메르스 등이 '지정감염증'으로 지정되었으며, 이번이 5번째 지정
2월 13일	**− 정부 긴급대책 (제1탄) 발표(153억 엔 규모)** * 긴급대책은 ① 귀국자에 대한 지원(30억 엔) ② 국내 감염 대책 강화(65억 엔) ③ 미즈기와 대책 강화(34억 엔) ④ 피해 산업에 대한 긴급 대응(6억 엔) ⑤ 국제 협력 강화 등(18억 엔)으로 구성
	− 중국 저장성 온주시의 감염 위험 정보를 후베이성과 동일한 '레벨 3'으로 격상하고 저장성에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해 입국 금지 시행
2월 25일	− 「코로나19 대책의 기본 방침」을 발표
2월 26일	− 2주 동안 대규모 이벤트의 중단 혹은 연기를 권고
2월 27일	− 전국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3월 2일~봄까지 임시 휴교 요청
3월 4일	− <신형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>의 개정안의 발표: 특별조치법의 대상으로 코로나19를 추가
3월 5일	− 한국, 중국인의 일본 입국 시 2주간 강제격리조치 실시 결정(3월 9일자 발효)
3월 9일	−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 금지를 결정
3월 10일	**− 정부 긴급대책(제2탄) 발표(약 2조 엔 규모)** * ① 감염확대방지 및 의료제공체제의 정비(486억 엔) ② 학교의 임시휴업 및 이에 따른 대응(2,463억 엔) ③사업활동의 축소 및 고용 대응 (1,192억 엔) ④ 사태 변화에 대응한 긴급조치(168억 엔) ⑤ 금융조치(1.6조 엔) − '긴급사태선언'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결정(13일에 가결) (총리가 지자체에 외출자제, 휴교 등의 요청/지시를 할 수 있는 법안)
3월 16일	− 일본은행이 긴급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고 **금융 완화 조치**를 발표 * ETF·REIT 매입 확대, 금융기관에 최장 1년간 금리 0%로 대출하는 조치 신설, CP 및 회사채 매입 규모 확대 등
	− 일본은행, 미 연준, 유럽중앙은행(ECB), 캐나다중앙은행, 영란은행, 스위스중앙은행의 6개 중앙은행은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달러 스와프 라인 금리를 25bp 내리고 당초 1주일 단위였던 공급 기간 외 3개월 만기 오퍼레이션을 제공하기로 합의(미국시간 15일에 발표)
	− 외무성은 스위스의 티치노주, 이탈리아 북부의 3개 주 및 스페인 일부지역 및 아이슬란드를 '레벨 3' 지역으로 격상하고, 독일, 프랑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 등 유럽 24개국을 '레벨 2'로, 영국 및 아일랜드를 '레벨 1(주의 환기)'로 지정
3월 18일	**−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추가적인 긴급 조치(「생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」를 발표** * ① 개인긴급소액자금(소득지원, 상한 20만 엔) ②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

일시	내용
	납부 유예 ③ 국세·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④ 지방세 징수 유예 등 포함
	– 외무성은 전 세계를 감염 위험 정보 '레벨 1'로 지정
3월 19일	– 정부·여당 및 일본은행은 4월에 발표할 예정인 긴급대책을 위한 논의를 시작
3월 22일	– 후생노동성은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이 생활자금으로 최대 20만엔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출특례조치를 결정
	– 외무성은 미국 전역을 감염 위험 정보 '레벨 2'로 격상, 불필요한 여행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
3월 23일	– 외무성은 이란 전역 및 유럽 18개 국가를 '여행금지권고' 수준인 감염 위험 정보 '레벨 3'으로 격상
3월 24일	**– 도쿄올림픽 1년 연기 결정**
	– 도쿄도지사가 도시 봉쇄 가능성을 언급
	– 문부과학성이 '학교재개 가이드라인'을 책정 * ① 출석정지 및 차별방지, ② 원활한 학습 진행, ③ 학교재개 체크리스트, ④ 임시휴교 가이드라인 등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
3월 25일	– 미국발 일본 입국자도 3월 26일 0시부터 2주간 격리조치 실시 – 외무성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토록 권고 (전 세계를 여행 자제 대상으로 한 것은 최초임.)
3월 26일	– 1월 30일 설치한 코로나19 대책본부를 <코로나19 특별조치법>에 근거한 내각 산하 조직으로 변경 * 이에 따라 전국 도도부현에 현지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추구할 계획
3월 28일	– <특별조치법>에 근거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전반적인 방침 등을 담은 「코로나19 대책의 기본적 대처방침(基本的対処方針)」을 발표
4월 1일	– 외무성은 한국, 미국, 중국 등 49개 지역을 입국거부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(입국거부 대상 지역: 총 73개)
4월 7일	**– 도쿄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이에 대응하여 「기본적 대처방침」을 개정**
	– '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경제대책(총액 108조 엔 규모)'를 발표 * ① 감염확대방지책과 의료제공체제의 정비 및 치료약의 개발(2.5조엔), ② 고용의 유지와 사업의 지속(80조엔), ③ 코로나 종식 후 경제활동의 회복(8.5조엔), ④ 강인한 경제구조의 구축(15.7조엔), ⑤ 향후 예비비(1.5조엔) 등
4월 9일	– 총무성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당 30만 엔을 지급하는 현금급부책인 「생활지원특별수당」의 지급기준을 전국 일률적으로 단순화하여 발표
4월 16일	– 정부는 기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**긴급사태선언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(5월 6일까지)** – 기존 7개 지역 및 홋카이도, 아바라키현, 기후현, 아이치현, 교토부 등 13개 도도부현을 '특정경계도시'로 지칭, 중점적으로 확산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발표
4월 20일	**– 1인당 10만 엔의 현금지급을 각의결정** * 4월 7일에 의결한 긴급경제대책 중 가계 현금급부안을 수정한 후 다시 각의결정. 이에 대응하여 추가경정예산안도 확대 수정함.
4월 26일	– 후생노동성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조정조성금 확충을 결정 * 휴업수당의 60%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게는 해당 초과금을 전액 보조(단, 중소기업에게만 해당)
4월 27일	– 사업규모 118조 엔의 긴급경제대책 관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
	– 일본은행이 ① 국채의 무제한적 매입, ② 회사채·CP 매입한도 확대, ③ 0% 금리 대출 대상기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양적완화정책을 도입
4월 30일	**– 긴급경제대책 실행을 위한 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이 성립** * 추경 예산에 포함된 추가세출은 25조 6,914억엔으로, 적자국채 23조 3,624억엔, 건설국채 2조 3,290억엔으로 충당함.
5월 4일	– 긴급사태선언 기간을 5월 31일까지로 연장
5월 14일	– 39개 현에서 긴급사태선언 해제(홋카이도, 도쿄, 사이타마, 치바, 가나가와, 오사카, 교토, 효고 제외한 나머지 현)
5월 21일	– 3개 도도부현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(오사카부, 교토부, 효고현)

일시	내용
5월 25일	**– 긴급사태선언 전면 해제**
6월 13일	**–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이 성립** * 추가 세출은 31조 9,114억엔으로 추경예산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 재원은 적자국채 22조 6,124억 엔, 건설국채 9조 2,990억 엔으로 충당
6월 16일	– 일본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고, 기업의 자금융통 지원 규모를 110조엔으로 확대
6월 18일	– 일본정부는 일부 국가(베트남, 태국, 호주, 뉴질랜드)에 대한 입국제한조치 해제에 들어감.
6월 26일	–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로 급여소득이 급감한 소득자들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특례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
7월 22일	– 정부는 수요 환기를 위한 Go To 캠페인의 하나로, 여행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'Go To Travel' 캠페인을 시작
8월 5일	– 일본정부는 유학생, 기능실습생, 기업 주재원 등 일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을 허용
8월 28일	**– 아베총리, 지병을 이유로 사임 발표**
	– 후생노동성은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조치를 12월까지 연장
	– 의료·검사 체제 정비 등을 포함한 '코로나19에 대응한 향후 대책' 발표
	– 일본정부는 9월 1일부터 재류자격자(영주권자, 일본인의 배우자 등)의 재입국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
9월 8일	– 정부는 말레이시아, 캄보디아, 라오스, 미얀마, 대만의 5개 지역에 대해 입국 완화 조치를 발표(일본인 장기체류자의 왕래 재개)
9월 16일	– 스가 총리 취임
9월 18일	–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출장 등 단기 체류자의 입국 제한 완화
10월 4일	**– 한일 양국 정부,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왕래 재개에 합의(8일부터 시행)**
10월 19일	– 일·베트남 양국 정부, 입국제한 완화 및 서플라이체인 안정화 합의
11월 10일	– 스가 총리,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3차 추경 편성을 지시
11월 19일	**– 일본 제3차 코로나19 팬데믹 돌입.** 도쿄도는 경계 레벨을 최고 수준인 '레벨 4'로 격상
11월 24일	– 정부는 삿포로시 및 오사카시를 'Go to 여행' 캠페인의 보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
12월 2일	– 예방접종법 및 검역법 개정안 성립 · 개정 예방접종법은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, 접종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시 의료비 및 피해 손실을 국가가 보상 등의 내용을 포함
12월 8일	**– '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'을 각의결정** * ①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 ② 경제구조의 전환 및 선순환 실현 ③ 국토 강인화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사업규모는 73.6조엔임.

자료: 각종 언론, 정부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정리